

2008년도 (사)한국정부회계학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일국제학술세미나

한일 공회계 제도의 현황과 과제

【오전 Session】

○ 윤대영(시즈오카 현립대)

- 시즈오카대 학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니시가키 학장님(한국어로 통역)

- 아까 여러분과는 인사를 드렸습시다만, 현립대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환영하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유별나게 덥긴 합니다만 저희가 같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형제로써 글로벌 선에서 오늘 학술회를 더운 열기를 없애도록 뜨거운 세미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일본 측에서는 현장에 계시는 학술이사진이나 현장에 계시다가 학교로 이전을 하신 전 프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세미나를 함께 있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됨으로 서로 지방행정이나 지방회계에 대해서 공통의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한정된 시간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시다만 내년에는 한국에서 이런 세미나가 이루어져서 일본 측의 여러 학술분야의 선생님이 가셨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이 그 활발한 진행의 첫발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 대학교에서는 예산검토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학술강의라든지 이런 학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을 지원을,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러분들과 이런 실제적인 학술강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젊으신 학자 분들을 중심으로 연세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러분들과 학술교류를 함께 있어서 오늘이 큰 획을, 한 획을 그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밤에는 교류회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류선생님께서 술친구시고, 폭탄주를 너무 좋

아하셔서 폭탄주의 스승입니다.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학술교류회가 큰 성과가 있는 한 교류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 윤대영(시즈오카 현립대)

- 시간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와주셨기 때문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수님하고 강교수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자분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은 오늘 발표는 통역을 거치기 때문에 발표를 될 수 있으면 심플하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저희들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신종렬(한국방송통신대)

- 여러분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I'm glad to meet you and I glad to have several experts with you in Korea and Japan about public sector. I introduce Prof. Choi and Prof. Kang who has interested in public accounting systems. Prof. Choi is the most famous Korean professor in the construction of Korean local information systems. Prof. Kang is interested in Korean accounting systems and he is a founding father, I think. So it is a contribution in Korean Prof. Choi is a primary offer in this paper and Prof. Kang is secondary offer. I think Prof. Choi give a presentation to you and Lee Yoo Mi interprets it into Japanese. I think you have the papers in Japanese translation. I think you have interested in Korean systems and further we have close relations in accounting systems and public local finance systems, too. Prof. Choi.

○ 최용락(숭실대)

- 소개받은 최용락입니다.

○ 강인재(전북대)

- 저는 전북대학교에서 온 강인재 교수입니다.

○ 최용락(숭실대/일본어로 통역)

- 저는 원래 재정이나 회계 쪽에 관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10년 전에 복식부기를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도입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시스템을 테스트하러 들어갔다가 그때서 부터 재정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10년간 대한민국 복식부기의 초기 선두주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작년에 구축된 대한민국 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정보시스템의 구성과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4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도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작은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을 잘살게 하기위한 목적은 똑같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지역성과 복리증진, 봉사성,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재원의 강제성을 가지고, 그리고 경비지출에 대한 모든 내용에 엄중한 회계절차에 따라서 책임성이 요구된다 라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지방재정환경에 대한 변화가 지금 한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제위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성과위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다음에 국제기준 GFS, IMF와 같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제사회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정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정보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공개, 우리의 자료의 대민공개와 주민참여유도 등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까지의 지방재정관리제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체계에 기반 하여 품목별 통제위주의 예산제도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책목표와 중기재정계획의 예산집행간의 연계가 취약하고, 연결이 어려웠습니다. 아울러서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

리가 어려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산재된 수행사업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사용된 모든 내용을 다음해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졌고, 재정범위의 국제기준에 비해 협소했으며, 신용도 저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의 효율화, 건전화, 투명화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 공통으로 활용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활용하는 통합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시스템의, 통합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이름은 e-호조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e-호조에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주의 회계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MF, GFS 매뉴얼에 따른 국제수준의 재정통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도변화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업무의 재설계 및 표준화 등을 포함하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고도화 사업을 통해 원가관리를 정착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내용의 분석, 진단, 예측을 통한 위험관리 등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서부터 간단하게 추진배경, 추진경과, 추진성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추진배경에 있어서 제1번은, 재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지방재정정보화라는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진재정관리제도의 반영 및 업무혁신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와 경비성격의 품목중심의 예산의 운용을 품목중심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제도 및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등 혁신적인 제도를 반영하여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업무와 조직, 법, 제도 등의 업무 재설계 및 표준화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적 정보와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보화 계

획에 따라 전 자치단체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에서 표준화, 통일화로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문제점도 대두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보시스템은 표준화, 통일화를 통해서 경비절약 효과가 가장 큰 효과입니다. 이 문제는 제도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표준화, 통일화를 시켰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커스터마이징 고객한테 맞는 변화를 적용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셋째로, 지방재정관리와 중앙재정관리간의 통합재정관리기반이 필요했습니다. 중앙정부재정관리라는 것은 국가재정관리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는 세계화 분권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제도의 혁신, 그다음에 지방재정업무의 상향표준화, 합리적인 정보관리 체계의 수립을 통한 지방재정운영의 생산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가 목표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간단히 표로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까지 해온 우리 통합지방재정의 성과를 간단히 표로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먼저 통합지방재정관리 정보화 사업인 BPR ISP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BPR은 업무프로세스에 관련된 연구이고, ISP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BPR ISP가 끝난 후, 2005년도에 표준재정정보시스템의 핵심분야인 예산, 지출 등 다섯 개 분야를 먼저 개발했습니다. 2006년도에 나머지 재정분야를 개발하고, 보급, 확산을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 통합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서부터 현재까지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단계를 간단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1단계에서는 1단계 BPR ISP 수립 단계에서는 통합재정관리의 혁신을 위한 업무 처리 및 전 과정에 대한 재설계를 했고, 밑에 4대 핵심과제와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했습니다. 4대 핵심과제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사업별 예산제도, 재무관리능력의 강화, 정보화 수준의 향상을 들었습니다. 각각의 세부추진 과제로는 번역된 자료로 대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계획했던 것 중에 안 된 부분은 전자고지와 전자자금 이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은행기관과의 연계와 많은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2단계에서는 최신 IT기술을 적

용하여 핵심 분야를 5개를 개발했습니다. 재정계획, 예산관리, 지출관리, 자금관리, 기준정보관리가 그것입니다. 우리 모든 시스템은 웹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단계에서는 확산 및 보급을 했습니다.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1차에서는 2006년 4월부터 이러한 업무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2차 사업이 끝난 현재는 246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의 확산, 보급이 끝나 있습니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고도화를 포함한 DB 구축사업은 기존의 데이터들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을 통합, 축적한 것입니다. 현재 만든 시스템을 EDW라고 하는데, 그것은 재정분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현재 정보시스템은 대한민국의 e-호조 시스템은 7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자료에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하신 분들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말을 못해서 이것을 번역할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재정정보시스템 일반 회계 기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원, 전국통합결산, 재정분석, 재정통합결산, 의사결정지원, 대민공개, 업무지원, 공통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지금 여러분들 그림은 없지만, 지금 설명 드린 7개의 영역에 대해서 각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자료로 배포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재정정보시스템 예산결산 영역에는 예산결산과 관련된 재정계획, 예산관리, 재무결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은 실제로 구축된 시스템을 캡처하여 예제로 든 것입니다. 재정정보 수입지출영역에서는 수입관리와, 재정의 수입관리와 지출의 계약관리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부채영역에서는 자금관리와 자산관리와 부채관리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분석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의 취합, 가동, 정제 등을 통한 통계 및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추진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2008년 6월까지 사용자 수는 9만 7천명 가량이고, 접속자수는 7백만입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통합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성과 및 예상치를 살펴보면, 연간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5억 6천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 중복자료 수집비용 절감에서 3억 정도를 절감하고 있고, 재사용에 의해서 연간 비용을 줄이고 있고, 관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연간 119억 정도의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용들은 투자대비 효과 returning investment

로 봤을 때, 46.5%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통합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한다면, 3년 이내에 returning investment, 투자대비 효과는 100%를 넘어설 것입니다. 앞으로의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은 향후 보다 많은 개선을 거쳐, 진보된 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완벽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한 전자날인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factor인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교육과 홍보가 안된다면 시스템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태동을 넘어 발전과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였고, 질문과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 신종렬(한국방송통신대)

- Thank you, Prof. Choi. and next we'll hear about the Korean e-hojo systems from Park Hee Shoock. Professor Park Hee Shoock is the Project Manager of public project department, SK C&C, the famous Korean company and he'll show you the real program operations.

○ 박희숙(SK C&C 이사/일본어로 통역)

- 훌륭하신 소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 SK C&C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희숙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교수라고 소개하셨는데 교수는 아니고 기업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최 교수께서 소개해주신 e-호조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개발하는데 Direct Manager로써 시스템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초대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발표해드릴 것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Part 1은 주로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고, 발표내용은 최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부분과 비슷해서 간략하게 말씀해드

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6분정도 소요되겠습니다. Part 2는 동영상도 시
행되어 한 10분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의 개요를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는 자료는 일어 자료도 있고, 영문 자료도 있습니다. 나중에 끝난 후
에 영문 자료로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재정의 투
명성 요구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제도적 개선, 국제적, 체계적
투명성의 요구하는 압력, 이 네가지가 주요 추진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
다. 그래서 e-호조 시스템의 구축방향은 재정분권과 성과, 근본적인 재정
혁신, 행정혁신, 국가재정을 완성시킨다는 것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추
진경위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BPR은 아까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2006년도까지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계는 확산, 보급에서 전국 246개 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 보급이 이루어 졌고, 13만 명에 대한 사용자 교
육이 있었습니다. 지난 e-호조가 접근한 개통방식이 한 날 한 시에 전체
시스템이 구체제를 쓰지 않고, 신체제로 넘어가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어마어마한 저항과 시행착오
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호조에 기본 사상은 궁극적으로는 재정의
의사결정력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 예산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장착하고, 정보시스템을 실시간 운영체제
로 만드는 등의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던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의 변화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핵심
부분은 통제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요지라고 할 수 있
고, 공무원의 임무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제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복식
부기 회계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의 개요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제도
결산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정보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무 전반에
관련한 자동화 부분을 슬라이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3
년도 말, 2004년도에 걸친 BPR ISP에는 총 400개 정도의 표준업무 프로
세스가 도출이 되었었습니다. 연일 구축사업에서 앞서 만들어진 표준 프로
세스를 애드프로세스로 다시 브레이크다운 시켰을 때, 1천 7백개 정도의

단위업무 프로세스가 도출이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업무를 전체적으로 자동화시키는 프로세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걸 일본어로 번역이 안 되어 있군요. 직접 다 설명하신 겁니다. GFS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재정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0개의 기초자치단체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재정통계는 지방재정 즉,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됩니다. 대한민국의 재정은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재정부분과 지방세를 이루고 있는 지방재정, 그리고 교육세로 되어있는 교육재정, 이 세 개의 재정이 GFS를 기준으로 한 재정통계를 내고, 발표해드리는 자료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국가 전체의 재정통계를 합산하는 dBrain이라는 중앙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e-호조의 연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직적 경계 및 수평적 경계가 seamless하게 연계체계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재정 쪽에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이해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연계방식은 EAI 방식과 web 서비스 방식이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 및 내용은 앞서 최고수께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일본어로 되어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고 화면상 잘 안보이시겠지만, e-호조 시스템의 기반 아키텍처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중앙 센터입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광역단체 아키텍처입니다. 230개 기초자치단체별로 만들어져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모든 시스템들은 듀얼서버 체제 하에서 이원화되어있고, 24시간 모든 체제로 웹 구동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최고수께서 말씀하신 고도화 입력은 부분은 훨씬 이 부분이 데이터 웨어하우징 서버입니다. 센터에서의 서비스는 데이터 웨어하우징 체제를 현재는 서비스하고 있고요, 향후는 각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체제를 같이 수용하는 하이브리드형 데이터 웨어하우징 서비스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연부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연동영상)

- 전체적으로 아까 시스템의 수치적인 모습을 잠깐 제가 스킵을 했습니다만,

말씀 드린대로 1천 7백 개에 달하는 프로세스를,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2천 3백 개의 프로그램을, 자바베이스의 2천 3백 개의 프로그램, 화면수로 보면은, 보고서 수는 4백 여종의 보고서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현재 246개 전체 자치단체가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최대 과제는 각 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연을 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일동박수)

○ 신종렬(한국방송통신대)

- Thank you, Park Hee Shook상. Next time we'll get comment from Prof. Izu.

○ 이주(시즈오카 현립대/한국어로 통역)

- 저는 시즈오카 현립대의 이주라고 합니다. 저는 회계라든지 회계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에 있어서 전문가에게 질문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크게 3가지 측면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건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공통된 프로그램을 쓰시는 점에 있어서 재정지방이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파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씬으로 인해서 다른 곳과의 명확한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유리하진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첫 번째 있어서,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부담은 어떻게 해소하셨는지요? 일본은 이렇게 통일된 제도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통일된 시스템을 쓰는 것으로 인해서 재정적 코스트라던지 규모가 아주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있어서 어떤 지원책이 있으셨는지요?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에서 지금 표나 설명을 들을 것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일본에서는 지방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빛이 일본에 비해서 적어보입니다. 혹시 그런 관리방법이 있으신지? 이런 두 번째 질문에서 관리방법이 있으신지에 연관이 돼서 관리보

다는 중장기 전략적인 계획으로서 복식부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점 이유셨는지? 아까 말씀하신 세계화, 분권화에 그런 흐름에 있어서 e-호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국내적으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감독기관의 기능이 강화되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방금한 질문과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경비절감이 주목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의 권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한 가지 우려고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권에 대한 강화나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렬(한국방송통신대)

- We'll think about proper person to this questions and at first we'll have second commentary comment and completely three questions will be answered about questions.

○ PMC 일본 공회계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직원(한국어로 통역)

- 제도의 차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복식부기에 대해 반발이나 알레르기가 없었는지? 국제공회계의 기준과 현재 한국의 재무재표제도와 의 차이가 있는지? 종합성이 있는지? 일본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새로운 공회계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해나가는데 있어서 자산평가를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서 법률로는 당시 현금주의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새로운 공회계로 바뀌나갈 때 복식부기로 바뀌나갈 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에선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조목조목 말씀하신 설명 중에 같은 서버를 사용한다는 설명이 있으셨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서버를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결산에 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년에 한 번의 결산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월차결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항목에 관한 것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차이점을 전국적으로 통일화된 시스템화를 하고 있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통일화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종렬(한국방송통신대)

- Prof. Kang answers this question.

○ 강인재(전북대/일본어로 통역)

- A lot of questions!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아까 국제회계기준이라든지 자산평가에 대해서는 김경호 교수께서 답변해주시고, 시스템 문제는 박희숙 이사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지방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시스템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써 만들었습니다. 지방정부는 부담이 안 들도록 배려를 하였고, 따라서 지방정부는 교육 같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몇 년 동안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측면에서 지방정부의 부담은 없었고, 한국의 지방정부는 일본과는 달리 상당히 규모가 큼니다. 공무원들이 최소한 300명 내지는 우리가 군하고 구가 조그만 자치단체인데, 이러한 소규모 자치단체도 상당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전문성에서는 모르지만, 재정면에서는 부담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한국은 지자체의 부채가 본질적으로 적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가 약 70%의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라든지 주민이 부채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채가 적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부채관리를 잘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식부기를 채택한 전략으로서 부채의 감소와 어떤 관계이냐는 질문은 사실 처음에 우리가 복식부기를 도입할 때 상당히 부채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라든지 알리기 때문에 부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복식부기가 부채와 관련 되서는 큰 기여

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채문제는 상당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돈이 많이 준다는 측면에서의 선전이랄까 이점은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것을 시스템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데 반발은 없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던 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었지만, 경비측면에서 무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한국은 아직 지방분권이 일본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법률적으로 사용에 대해서 강제하기 때문에 그런 반발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복식부기를 도입할 때 반발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반발의 이유는 복식부기는 기업의 것인데 어떻게 정부에서 복식부기를 쓰느냐하는 인식 때문에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정보가 공개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든지, 한국에서는 판공비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자치단체장이 판공비를 쓰는데 정보가 속속들이 나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워낙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선전을 잘하고 한국의 정부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했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도입되는데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정부회계학회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여기 오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전도사, 전파사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회계문제는 김경호교수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다.

○ 김경호(홍익대/일본어로 통역)

- 한국말로 할게요. 제게 답변을 하라고 부탁받은 것은 제가 한국의 정부회계 기준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국제공회계 기준과 우리 지방정부 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이 없는지에 대해 물어오셨습니다. 한국의 지방정부 회계기준을 만들 때 직접적으로 국제회계 기준을 참고하고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제 공회계 기준은 국제 회계기준과 유사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회계 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매우 유사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정부회계기준을 만들때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많이 참고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공회계기준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

겠습니다. 그러나 정부회계기준이 앞으로도 계속 개정되고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국제 공회계기준을 좀 더 많이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각 지방자치단체 자산평가를 어떻게 하는냐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정부회계기준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대한 평가는 도로 인근에 있는 서로 지가가 다른 지역의 평균가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점은 많지만, 그 정도로 시작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 박희숙(SK C&C 이사/일본어로 통역)

- 질의해주신 순서대로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시스템에서 복식부기의 변환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방식은 현재 e-호조시스템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체계를 사실 혼용하고, 둘 다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그 중에 복식부기의 변환방식은 예산코드와 회계개정코드, table로 이루어진 변환테이블이 존재합니다. 그로인해서 자동으로 복식부기로 변환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서버를 쓰는가 하고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서버라는게 혹시 제가 설명하는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자치단체별로 이중화된 서버를 쓰고 있다는게 정확한 답변이겠고요, 그 이야기는 246개 자치단체 곱하기 2개씩의 컴퓨팅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단순하게 말하면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데요. 말씀드린 컴퓨팅 장비는 1천 5백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 각 자치단체 규모별로 5억에서 25억 사이로 컴퓨팅 환경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용된 서버장비들은 주로 IBM가 80%, HP가 20% 정도, 그다음으로 세 번째 IT관련한 질문으로는 각 자치단체별 특성을 정보시스템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프리젠테이션에서 잠깐 언급

되었다시피, 현재에는 표준화된 체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CBD, 객체지향설계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술적인 컴포넌트 방식을 채택을 할 것입니다. 업무적 관점에서는 비즈니스 컴포넌트라는 방식을 채용을 했습니다. 현재 단일체계라 함은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각 자치단체 특성별 컴포넌트화 시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까 표준화된 단일체계라 함은 이 테크니컬 컴포넌트와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장착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개별적 특성을 가진, 각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테크니컬 컴포넌트와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 최용락(승실대/일본어론 통역)

- 질문 중에서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제가 적은 것 중에, 시스템적으로 질문하신 분 중에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넘어가는 문제점은 없었느냐, 어떻게 하였느냐를 질문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는 이슈가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복식부기를 도입할 때 지출시점을 전표를 발생시킬 것이냐, 거래 발생시점에서 전표를 발생시키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거의 일년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식부기는 발생주의기 때문에 거래발생시점위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뭐기 있었냐면 같은 서버를 전국적으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컴포넌트 쪽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서로 다른 환경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박이사님이 컴포넌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기존에 썼던 랭귀지나 프로그램 개발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웹페이지 프로그램과 자바만을 이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프라와 상관없이 공통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결산을 일본은 일년에 한 번하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입니다. 한국도 결산은 한번 합니다. 다만 정보시스템을 만들어보니까 업라인으로다 즉시성 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매분기별 결산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산, 수시결산을 반영한 이유는 공무원들의 관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기능입니다. 한국도 법률적으로 일

년 일회 결산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윤대영(시즈오카 현립대)

- 내용이 참 저희들 통역하는 입장에서 스무스하게 통역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오버 되었지만, 그래도 한시간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밖에는 더우니까요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고 남은 시간에 우리 학교 캠퍼스를 좀 둘러보시고, 위에 가면 아주 좋은 산책길이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 나가셔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그 뒤로 가면 아주 넓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풍경이 있는데 거기도 구경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미(통역사)

- 오후 세션은 1시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적어도 5분전까지 다시 입장을 해주시고요, 점심은 여기서 드셔도 됩니다.

(일동박수)

【12시 10분 회의중지】

【오후 Session】

○ 정성근(삼일회계법인/일본어로 통역)

- 저는 우선 개요부터 시작해서 Budgeting Process, Accounting Standards, Laws & Acts, System 이 순으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하는 처음에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프로세스, 법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대영(시즈오카 현립대)

- 사회자 소개

(일동박수)

○ 정성근(삼일회계법인/일본어로 통역)

- 저희 나라에서는 2006년도에 dbrain이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아까 보였던 시스템은 e-Hojo라는 지방정부의 시스템이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보여드린 것은 중앙정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국가회계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를 하게 됨으로써 그 시점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복식부기 발생주의 도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부분은 Budgeting Process 특히 재정 관리 쪽의 변화가 필요한가와 하는 부분과 재정 관련 법령들이나 제도가 준비되어 하는데 준비되어 있는가와 관련 시스템이나 조직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발생주의의 도입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주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측면에서는 어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관리체계의 수립, 그리고 관련 재정지표와 관련된 영역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실사를 통해 오픈링 밸런스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d-brain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제도와 회계제도, 관련된 법령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마치 뛰었다가 붙었다가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관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아마 커밍 톱니바퀴에 조그만 하게 다시 붙여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회계, 법률, 시스템을 하나의 큰 틀로 보고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와 서로 잘 콤팩트블한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톱니바퀴인 Budgeting Process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Budgeting Process를 아까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전환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랬지만 중앙정부에서도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정과목 중심의 예산편성 체계에서 사업 프로그램 단위별로 예산

을 편성하는 체제로 바뀌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컨트롤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전략적인 계획적 수립에 유리한 체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 사업별로 원가를 집계하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투입과 산출, 투입된 비용을 그것으로 인해서 산출된 산출물을 비교하기가 쉬운 체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취했던 어프로치는 bottom-up 어프로치였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품목별 예산체계 하에서도 수 없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램단위별로 묶여 내는가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취했던 방식은 bottom-up 어프로치, 기존의 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단위로 묶여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뭐였나 하시면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하나의 정책단위 또는 어떤 예산집행 단위, 성과평가 단위로서 그러한 구실을 해줘야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묶다보니 그러한 의미들이 퇴색하였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별 총원가 토탈 코스트가 집계가 잘 안 된다는 문제라는지 예상했던 목표로 했던 퍼포먼스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문제, 각 프로그램별 관리자들이 설정이 안 되어 있던지, 설사 일부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관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책임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재설계를 하고 또 총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간접비, 공통경비들을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방법, 그리고 성과평가체계와 연동되고 차기 예산에 반영하는 피드백 체계 이런 것들을 솔루션으로서 고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관리자의 오너십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부터 최종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 관리자가 오너십을 가지고 그러한 체계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 등이 있을 때 새로운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톱니바퀴인 Accounting Standard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민간부분은 집행과 그에 따른 기록이라는 두 체계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정부에 있어서는 그 앞에 Budgeting이라는 새로운 어떤 절차

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모든 의사결정은 집행시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면 정부는 예산편성 시점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Budgeting이라는 것이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차이로 인해서 정부 부문의 독특한 특징인 펀드 어카운팅이라든지, 칸막이를 쳐 놓고 서로 다른 펀드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칸막이 회계가 발달하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매핑, 민간 기업에서는 수입과 비용이 대응되어야 하는데, 정부 부문에서는 수입과 비용이 서로 매칭 되는게 아니라 국가가 사용해야 할 전체예산을 정하고 그것을 수혜자와는 상관없이 세금으로 걷는다든지, 또는 자산이 민간부분의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이라는 자산의 일반적 정의가 적용되는 반면에 정부에 있어서의 자산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비용만 발생하는 자산의 정의부터 서로 다른 개념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간부분과 정부부분 회계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Budgeting이라는 바퀴와 회계기준 Accounting이라는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있는데, 저희들은 프로그램 예산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하나의 예산편성 집행 단위로서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재무제표에서 프로그램별로 반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별 순원가를 계산하는 그런 구조로 재무제표 양식을 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예산과 회계를 연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산을 현금주의로 편성하고 재무 기록은 발생주의로 하다 보니 그것들을 어떻게 연계시키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숙제입니다. 예산과 회계의 연계는 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정과목차원에서의 연계, 두 번째는 재무제표 차원에서의 연계, 세 번째는 예산행위의 분개형태로 재무기록상에 통합시켜보는 세 차원의 연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우리 예산기록, 기존의 단식부기 기록과 새로 도입된 어떤 시스템 간에 기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dbrain이나 e-Hojo도 그렇고 기존의 구축원리가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이야기하는 씨오에이 차원에서 계정과목을 매핑시킴으로서 두 가지 과정을 수행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윤대영(시즈오카 현립대)

- 조금 천천히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통역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정성근(삼일회계법인/일본어로 통역)

- 기존의 재무보고 모델이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으로 이원화되면서 재무보고 모델도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하나의 재무보고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산집행현황표입니다. 이 재무제표는 단식부기 결산서를 요약한 표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기본 재무제표로 두느냐 아니면 필수보충정보 보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이원화 되어 있던 재무보고가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들 정부회계 기준의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이 있고, 회계 기준서, 가이드라인, 사업별 회계처리 준칙, 세부적인 계정과목 지침서, 질의회신 Q&A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령이 국가재정법, 국고공관리법, 국가회계법 이렇게 세... 재정에 관련된 세 가지 법령이 있었는데, 각각의 법령의 상충문제가 기존에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세 가지 법령의 하나의 법체계처럼, 하나의 챕터의 역할을 하도록 일관성 있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정부의 다른 회계기준을 쓰고 있었는데 국가회계기준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하게끔 법을 개정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보고절차에 있어서도 기금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중적인 보고절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단축하고 관련 법령의 중복문제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스템 전문가도 아니고 지방 쪽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dbrain에 아웃풋 말하자면 재무제표라든지 각종 재무정보들이라든지 아웃풋은 점검을 함으로써 어떠한 문제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또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회계기준 등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 dbrain에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그리고 외부 dbrain과 연계되는 다른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관계 등을 체크해서 종합적인 시스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바에 의하면 다

섯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분개측면에서의 이슈, 아까도 e-Hojo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분개 측면에서의 이슈가 있었는데 많이 나는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은 해결되었고, 크게는 동그라미 새까맣게 칠해놓은 두 개의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보완해야 할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내부거래의 제거, 정부는 생리상 기본적으로 내부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내부거래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아직도 공무원분들은 단식부기 현금주의, 현금주의 단식부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동오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교육이라든지 관련된 조직들을 정비하든지,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동박수)

○ 모리 교수(시즈오카 현립대/한국어로 통역)

- 사회자 모리 선생님은 시즈오카현립대 소속이십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오전에 한국 측에서 통합재정 개혁 시스템에 대해서 세 가지 배경을 해주셨는데, 일본에서 시스템 개혁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은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다가 회계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돈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배경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모리선생님께서 사회자이시기 때문에 질문은 여기서 그냥 안하시고 코멘트 데이터인 우에노 선생님께서 코멘트 데이터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우에노 타케후미(시즈오카 현립대/한국어로 통역)

- 저는 시즈오카현립대학 경영정보학부의 우에노 타케후미입니다. 이번 발표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는 재무회계가 담당이고 중심으로 하시는 것은 기업회계가 전문이라고 하십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함에 있어서 공회계에 있어서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회계가 예산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회계자료를 말씀드릴 때 네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회계시스템과 예산회계시스템, 회계시스템이라는 것은 예산시스템의 시행단계에 머물러 있

는 시스템, 두 번째는 회계시스템과 예산시스템은 링크가 되어 있어서 서로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 세 번째는 예산과 회계는 링크는 되어 있지만 회계 기준이라는 틀에는 서로 다른 틀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네 번째는 예산과 회계 절대적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이라는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은 어떤 패턴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패턴인 예산과 회계는 링크가 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회계기준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판단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회계라는 정보라는 것은 어떻게 예산을 평가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럼 점에 있어서 한국 측이 세 번째 파트인 예산과 회계는 링크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회계기준의 틀에 속한다고 볼 때,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선진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51페이지를 보시면, 이 분은 기업담당이라서 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각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문제를 어떻게 적정하게 어떻게 배분하는지 구체적으로 원가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기업에서도 어려운 문제인데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행정 효과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돈으로 판단하면 제일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행정효과가 비용 대비 수익이라든지 이런 정성적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더불어 정책적 효과를 어떻게 세입에 반영하는지 답이 있으면 대답을 해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리(시즈오카 현립대/한국어로 통역)

- 답변을 해주실 분...

○ 정성근(삼일회계법인/일본어로 통역)

- 혹시 대답을 해주실 다른 분이 있으십니까? 답은 한글로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원가부분은 사실 다음 사업을 통해서 할 부분인 것 같고, 저희들이 dbrain 시스템이 중앙정부를 커버하는 그런 단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가배분 기준으로 정확히 원가를 배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해결되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이상으로 정부부분에서 사실상 평

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전에는 투입과 산출을 비교할 수 있는 체계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사업별 프로그램별 예산제도를 전환하면서 사업별로 관련된 원가를 다 모아보니까 적어도 숫자와 숫자를 비교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돈을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었느냐, 이 돈을 들어서 어떤 도로를 건설 했느냐 하는 것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작년과의 비교를 할 수가 있고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정부기관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정성적인 효과들을 판단할 수 있는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틀을 갖추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어려운 질문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확하게 성과평가가 예산에 피드백 되는 체계를 완전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과평가를 통해서 적어도 어떤 식으로 패널티를 줘야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 하기 위한 틀화 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이미 작년도에도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산을 인센티브를 주고 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패널티를 주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 우에노 타케후미(시즈오카 현립대/한국어로 통역)

-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시스템이시고, 오전에는 설명을 들을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이신거죠. 그러면 오전하고 오후에 정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발표 중에서 어떤 것이 같은 점이고 어떤 것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근(삼일회계법인/일본어로 통역)

- 기본적으로 어떤 재정체계는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전환을 했다. 그러한 틀을 이행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가 구축되고 있다라는 점, 시스템도 e-Hojo(지방정부)와 dbrain(중앙정부)이 동시에 자동분개라는 철학을 구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플로어에서 질문(한국어로 통역)

- e-Hojo(지방정부)와 d-brain(중앙정부)은 자동적으로 집계되는 건가요?

○ 정성근(삼일회계법인/일본어로 통역)

- e-Hojo는 지방정부의 시스템이고 d-brain은 중앙정부의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두 시스템이 공히 예산과 기록이라는 것을 자동분개라는 형태로 해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유미(통역)

- 이해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 모리(시즈오카 현립대/통역)

- 오후의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 김경호(홍익대/일본어로 통역)

- 오후 두 번째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3섹션입니다. 사회를 맡은 김경호입니다. 먼저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역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맡은 세키가와 타다시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공인회계사이입니다. 토론을 해주실 최대규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공인회계사이며 성도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세키가와 타다시씨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 세키가와 타다시(공인회계사/한국어로통역)

-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말만 한국말로... 세키가와 선생님은 국제공회계기준심의회에 소속되어 있으시고 일본의 공회계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위에 정부, 아래에 에이전시라고 되어 있는데 에이전시는 정부산하기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 입니다. 일본에서는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밑에 정부산하기관 에이전시에 속한 곳입니다. 에이전

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 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즈오카 현에서 설립한 지방독립체여서 로컬, 지방독립이라는 에이전시지방독립후 법이라고 적힌 곳에 속합니다. 아침에 학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 시즈오카현립대학에서는 발생주의에 기본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흰색 블록보이시죠? 수정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수정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냐고 말씀을 드렸다면 완전히 현금주의가 아니라 출납정리기간이라는 기간을 일본은 설정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현금주의가 아니라 수정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3월말에 결산, 마감을 하는데 그 마감이 끝이 아니라 4-5월 달에 수정을 하실 수 있는데 법으로, 이게 완전한 현금주의가 아니라 수정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4-5월말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이번 연도도 포함할 수 있고 전년도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부회계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그래서 구별 짓고 있는데, 그 특별회계에서는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특별회계에서는 기업처럼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뀌는 이행 프로세스 상에 있는데요. 두 가지로 흐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이전시라고 해서 독립법인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에이전시라는 법률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종래의 가격, 종래의 정부라는 것은 현금주의, 에이전시는 같은 것은 분리기 때문에 발생주의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시라는 제3의 일본에서는 정부산하기관이지만 발생주의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시켜서 에이전시라는 회계체제를 갖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에이전시를 만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두 번째는 정부 자체에 이제부터는 발생주의를 도입하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황으로서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현금주의가 우선입니다. 일본은 현금주의를 바꿔서 발생주의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현금주의를 바탕으로 회계를 결산하고 회계를 보신 다음에 그것에 플러스해서 발생주의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금주의 의거해서 회계를 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을 하지만 발생주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와 더불어 회계감사도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에이전시는 나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중앙

정부의 흐름을 보고 계시는데요. 2000년에 보시는 거와 같이 균형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을 제출하였는데, 생각하였는데 처음에 일본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대차대조표를 기본으로 해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00년도로 되어 있는데 1999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01년도에 시범적으로 대차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더 붙이자면 2003년도 내용을 2001년 9월에 작성한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청사별로 재무제표를 만들기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재무제표를 표를 만들 때에 대차대조표에 자산, 부채 등 기본적인 항목 등을 넣어서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두 가지 패턴으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패턴은 보고서 단위와 작성하는 단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별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청사별로 만들 때 세 종류로 나누어서 만들었습니다. 동그라미 세 개가 보이시죠? 첫 번째가 일반회계만 보는 재무회계표, 말의 전체인 재무회계표, 일반회계+특별회계 재무제표. 아까 말씀드린 독립된 에이전시를 포함한 연결 재무서류, 예를 들어서 각 청별마다 이런 재무 서류를 만든다고 했는데 재무처에서 만드는 재무 서류는 일반회계 재무처 하나, 일반회계+특별회계 재무처 하나, 에이전시를 연락 재무표를 하나 만드는데 이 세 개를 재무처에서 하나로 만드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그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그것을 다 통합해서 국가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곳이 재무처이다. 이것을 공표하기까지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맨 마지막은 2003년도를 예산을 2005년 9월에 공표한 것을 말합니다. 그 1년 반이 걸리는 이나 걸리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기준 항목이 있는데요. 영어는 어떻게 불러야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붙이신 이름인데 대차대조표, 업무비용계산서, 자산부채차익증감계산서, 구분별수입지출계산서입니다. 공기업 특징으로 두 번째 서류 같은 경우에는 비용만 계산됩니다. 수입에 관한 것은 세 번째에 기록됩니다. 다음은 지방정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금 영어로 설명된 것은 1999년에 시작해서 총무성에서 법률을 만들었다가 그게 구성력이 없어서 동경구청 모델을 만들었다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총무처에서 다시 개정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를 적용하는데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2001년도에 두 번째 라인에 총무처에서 발표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3부터 발생주의로 쉬프트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시청·지방정부별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홍익대/일본어로 통역)

-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발생주의에 근거한 회계제도의 도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제도에서 두 가지 모델을 병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기도, 두 가지를 전부 제출하기도 하고, 또는 전혀 그런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 세키가와 타다시(공인회계사/한국어로 통역)

- 저희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왜 이렇게 각 지방정부가 다른 회계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법률적인 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은 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발생주의로 이행하면서 재정원조를 안 해주는 비용적인 문제, 세 번째는 일본이 한국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30개정도 밖에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00정도의 숫자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만 명을 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작성능력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47이라는 숫자는 일본의 도도현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의 팔도처럼 47개의 도도현이 있고, 그 안에서 광역시처럼 큰 도시가 15-14개 있고요. 그 밑에 산하에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1098+956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모든 네 개의 보고서를 사용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6%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100%연결된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쓰는 보고서 단위이고요. 이 노멀 어카운트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가 가지겠습니까? 영어로만 노멀 어카운트가 되어 있는데, 이 노멀 어카운트가 일본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인데 어떤 것을 일반회계로 재무제표로 만들고, 어떤 것을 특별회계 재무제표로 만들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어떤 항목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을 일본 총무처에서 결산통계를 만들기 위한 단위로서 쓰이고 있는데 결산일반회계+수입지출+a로 표시되어 있는데 보통회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데 노멀 어카운트 이해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

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을 반영하지 않고 비용만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61페이지의 표와 62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정부와 로컬의 차이점이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공표기간은 1년 반 이상이 걸리는 공표기간이 있는데 왜냐하면 공식적인 제도는 현금주의로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결산이 끝나면 여러 곳에서 숫자를 모아서 다시 한번 결산을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표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결산하는 식이기 때문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적으로 예산결산을 한 다음에 숫자를 남았을 때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3년 뒤, 두 가지 과제 목표가 있는데, 발생주의를 추진하는 점, 공표기간을 단축시키는 두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복식부기를 도입을 해야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과 정부, 정부에서도 특별히 일반회계와 차이가 있는데 통일해 나가는 것이 두 가지 과제와 더불어 플러스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 더 추가를 드리면 국제적인 입세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국제공회계심사위원회에서 근본이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공표가 되면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최대규(성도회계법인/일본어로 통역)

-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느낀 소감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현황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질문이 많은 것 예상이 되어서 세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직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두 번째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해서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교육과 시스템 준비, 이런 부분인데, 일본에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해서 일반공무원의 교육, 그 다음에 결산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 등의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납폐쇄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된다면 출납폐쇄기한 중의 거래 4-5월 중의 거래가 작년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홍익대/일본어로 통역)

-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 더 있으시면 그것까지 추가 해서 답변은 나중에 모아
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인재 교수님

○ 전중열(서울산업대/일본어로 통역)

-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무제표 사이의 중요한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 김경호(홍익대/일본어로 통역)

-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더 질문이 있으십니까? 하나만 더 네 우리
심재영 교수님

○ 심재영(한국방송통신대/일본어로 통역)

- 강 교수님과 비슷한 질문인데, 이런 회계제도를 개혁하면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시작했는지? 지금 과정이 어떠한지?

○ 김경호(홍익대)

-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세키가와 타다시(공인회계사/한국어로 통역)

- 이것도 하나의 숙제이기는 한데 지금 통일된 교육 시스템은 없습니다. 개
인적인 레벨에서 학원을 간다든지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금주의라는
것이 발생하면 예산연도에 내에서 사용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
야 하는데, 4-5월 달에 물품을 구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로 출납정리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글로
스가 정부, 네트는 지방정부, 오퍼레이팅이라는 등 인데 구분이라는 영어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말고 그래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경호(홍익대/일본어로 통역)

- 제가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세입이 전부 순자산변동

표에 들어 가니까 비용이 총계로 다 재정운영표에 기록이 되고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수입비용 네팅한 결과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표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세키가와 타다시(공인회계사/한국어로 통역)

- 회계제도를 어떤 목적으로 하셨느냐고 여쭙 보셨잖아요. 일본에서는 자산 개혁이라는 흐름이 생겼는데 재정상태가 나쁘다 보니 불필요한 재산을 팔아서 대차대조표에 있는 부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 회계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발생주의가 어정쩡한 상태인데 완전한 발생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정쩡한 상태가 현실이고, 명확한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여쭙 보셨잖아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일반회계가 어렵고 돈이 없는데, 특별회계에는 돈이 많다는 루머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것이냐 하면, 정치인들만이 숨겨놓은 돈지 않느냐는 루머가 있는데, 실제로도 있다고 판명되었는데, 대차대조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모르는데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라고 표를 그리기를 하셨지만 일반회계를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보면 어디서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김경호(홍익대)

- 이상으로 세 번째 섹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디스커션】

○ 윤대영(시즈오카 현립대)

- 시간이 되었습니다. 패널 디스커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배교수님, 우리 저기 끝나고 기념사진을 한 장 찍자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비가 좀 올 것 같죠?

○ 가와세 교수(쿄토 부립대학/한국어로 통역)

-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신데 마지막 세션입니다. 힘내시고 잘 들

어주세요. 그럼 파넬러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전중열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분, 이삼주님이요. 시즈오카 현립대의 이쥬 모리나오 선생님이십니다. 시즈오카 현의 총무재정실에 근무하시는 스즈키 토오루씨입니다. 맨 처음에 스즈키씨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이 있으실꺼구요.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이거 오전오후 세션을 들으시고 느끼신 감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이므로 의문점이나 질문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스즈키 토오루(시즈오카 현 총무부 재정실/한국어로 통역)

- 지금 보시는 판넬을 지금 넘기시고 계시는데요. 저번에 설명드린 경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공회계는 두 가지 모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모델 아니면은 총무성 방식 개정모델 두 가지가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선택권이 있습니다. 두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맨 위에 고정자산에 산정방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제일 틀린 부분이구요. 그 기존 모델같은 경우엔 모든 자산을 리스트업해가지고 검정가격으로 평가를 하는데 총무청방식 개정모델같은 경우는 판매가 가능한, 매각이 가능한 자산만 시가관정을 해서 그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고정자산 전모를 정비할 하는 식으로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게 기존모델같은 경우는 전부 무슨 리스트를 다 업해야 되니까 부담이 굉장히 처음에 시작하는 부담이 크다는 점 하지만 총무성 개정 모델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거기서 셀렉팅해서 시가관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적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현상으로써는 이 쪽 가벼운 쪽 총무성방식 개정 모델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신게 시즈오카 현의 상황인데요, (평성)20년도 21년도 결산이 매년 총무성 방식으로 그 다음 22년도 결산부터는 기존모델로 하는 병행식으로 하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두 개를 병행을 해서 쓰는 거냐면요. 기존모델 자체가 굉장히 모든 리스트를 업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모든 아이템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병행해서 쓰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총무성 방식의 개정, 빨리 공표를 하라는 그런 프레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총무성 방식의 개정 모델을 쓰시고는 있지만 그걸 진행함과 더불어서 나중에 그

좀 더 상세한 회계를 하기 위해서 기준모델을 더불어 쓰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시즈오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요 지금 평균치 넘버 9정도로 빨리 공표를 하는 현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작업스케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평성 2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올해 2008년을 얘기하는 거구요 그 왼쪽에 있는 게 총무성 방식의 개정모델, 오른쪽이 기준모델인데 그 4월부터 7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언제 모집을 하는지 업자를 결정하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공표를 할 수 있는 거는 10월이나 11월쯤 될 거 같아요. 이것이 확정상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기준모델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올해 지금 4월 달에 시스템 발주를 준비 중이구요. 공표가 되는 거는 22년이니깐 앞으로 2년 뒤 11년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거는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과제를 몇 가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총무성 방식 개정모델의 과제로써는요, 지방에 재량을 전부 맡기고 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회수불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범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같은 게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라고 합니다. 지방에 재량을 맡겼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지 어떨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기본모델같은 경우는 전부 그 항목을 리스트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의 너무 큰 규모의, 큰 규모라는 점이 하나의 리스크구요. 양 두 가지 모델을 하겠지만 양 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서는요,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회계를 하고 계시니까 공표를 했을 때 알기 쉬우실지도 모르지만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알기 쉬운지 어떨지 그리고 알기 쉽게 하는 게 이분들의 과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기본적으로 현금주의 플러스 어떤 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인력 면에서, 시간 면에서도 그런 거를 어떻게 절감을 할 지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즈오카 현의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동박수)

○ 가와세 교수(쿄토 부립대학/한국어로 통역)

-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그게 얼마만큼 주민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메리트를 가져다주는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실제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

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라는 게 한 가지 질문이셨구요. 일상 재무적인 그 체크를 하는 중에서도 의회라든지 자치단체 정부가 그거를 어떻게 유효하게 써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중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세요.

○ 전중열(서울산업대/일본어로 통역)

- 지금 그 일본쪽하고 우리나라쪽도 마찬가지로지만은 복식부기 전반에 관련해서는 인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회계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연이어서 교육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데 앞서 우리가 쪽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었지만은 관련된 그 질문 혹은 관련해서 답변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원가정보 행정서비스,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그런 원가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원가회계기준이 과연 일본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쪽에서 마련이 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마련이 되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무재표, 재무보고서 상에 어떻게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 덧붙여가지고는 과연 아까 우리가 예산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국에 관련해서는 얘기를 했지만은 일본정부의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제도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별 예산제도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요게 관련성이 있구요. 그 다음에, 계속할까요 넘길까요.

○ 플로어

- 아까 가와세 선생께서 말씀을 하신 몇 가지..질문이 있죠, 의문점 그 점에 대해서 혹시..

○ 전중열(서울산업대)

- 시즈오카에 관련돼서요? 시즈오카현 정부에 대한?

○ 플로어

- 그러한 시스템이 얼마나 그런 주민에게 메리트가 있느냐에 의문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혹시 뭐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 전중열(서울산업대/일본어로 통역)

- 그것이 아까 전에 질문한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정보가 산출될 수 있는 회계기준이 따로 마련이 돼 있는지 또 그것이 마련돼 있다면 재무재표 상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 제도가 지금 품목별로 현행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별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전부 다 몽똥그러져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요? 음,, 우리나라 형편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뜻인가요?

○ 윤대영(시즈오카 현립대)

- 새로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저게 아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같은 상황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 전중열(서울산업대/일본어로 통역)

-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쪽에서에 대한 제가 느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태까지 한국쪽에서도 복식부기에 관련돼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느냐 지자체 특별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시다. 그래가지고 지금제가 스스로 일본 관련돼서 질문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연 복식부기라는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재무회계측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자산이래든지 부채,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많이 좋은 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실지로 주민들에게 와닿는 그러한 정보가 제출이, 제공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고 또 그것이 국가지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과연 구현될 수 있을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원가회계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원가회계기준이라고 나온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 가와세(교토 부립대학/한국어로 통역)

- 지금부터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세션에서 느낀 감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의문이나 그 질문사항을 어느 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어로 통역)

- 예, 저는 한국에 지방행정연구원에 근무하는 이삼주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일본의 총무성하고 비슷한 한국의 행정안전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산하의 연구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는 주로 지방재정, 지방행정 그걸 연구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체적으로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받은 느낌은 일단은 한국하고 일본의 행정시스템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본에 하나의 제도가 생기면 얼마 있다가 한국에도 유사한 제도가 생기는 이런, 전체,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상황이 한국에 많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왔고 또 그래서 일본의 상황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복식부기 도입과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도입과정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전체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약간 늦기는 합니다. 늦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한국하고 굉장히 유사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부문에 복식부기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일본과 한국이 갖고 있는 차이점은 사실은 한국은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복식부기 도입을 시도했는데 반해서 이전까지 일본은 중앙정부는 권고 수준에 머물렀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2007년도에 246개의 자치단체에 모두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도입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알고로는 일본의 공회계원칙이 만들어 진 게 80년대 말 또는 90년대 초에 만들어졌는데 아직은 일본자치단체 모두에 복식부기가 도입이 안된 걸로 오늘 제가 배웠습니다. 공회계원칙이 만들어진 그 시점에서 옆의 현인 리애현 같은 경우 그때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시즈오카현은 아직도 될려면 3년 정도 더 준비기간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이 한국하고 아마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자께서 던져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꺼는 발생주의를 도입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효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주요질문이 될텐데요. 첫 번째 것은 한국의 상황을 얘기하기보다 사실 좀 개념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 같구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의 상황을 조금 곁들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효용 부문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바로 재정책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정책임성이라는 것은 결

과적으로 주민들이나 상위정부 또는 하위정부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데요. 책임을 정확히 지기 위해서는 주변의 감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집단에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어야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하면은 현금주의 회계에 비해서 발생주의가 조금 더 나은 회계시스템으로 되어 있구요.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된 만큼 이 지배-통제 집단, 그 중에 주민들도 보다 더 정확한, 그리고 또 적시에 정보를 입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주민들에 대한 효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그럼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효용을 줄 수 있느냐,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한국의 복식부기 도입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도에 도입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도입하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 이후에 현재 아주 거세게 논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정 중에서 그나마 방법론과 관련된 것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 복식부기 관련 지표들이 개발된 것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1인당 인건비 같은 것을 지표로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상대비교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우리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를 다른 자치단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면에서 이런 평가지표 같은 것들을 좀 공동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가와세(쿄토 부립대학/한국어로 통역)

- 질문 없습니까? 간단하게.

○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어로 통역)

- 예, 말이 너무 많은 거 같아가지고 조금 이게 되는데, 시즈오카 현에서 발표하신 것 중에서 한국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매각자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다음에 그거를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그걸 한, 두 단어로 얘기하기엔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항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유사한 사항이 바로 사회간접시설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의 경우는 사실 매각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자산을 보유할수록 또 지방정부의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리 비용으로, 다른 자산하고 동일하게 보기 상당히 어려운 특수한 자산인데, 이 자산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에서 일부논의는 이걸 제외합시다, 자산으로 하지 맙시다, 또 일부 논의는 자산으로 합시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회간접시설을 자산으로, 자산에 포함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관리에 중점이, 중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사회간접시설을 누가 관리하겠는가 관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에 중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산에 포함시키게 됐는데 아마 그런 논의가 일본의 매각가능 자산의 범위를 정하는데 하나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또 하나의 사례는 불란서의 사례가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란서에서도 처음, 발생주의 회계를 처음 도입할 때 이런 기취득자산에 대해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기취득자산에 대해서는 재정상태 보고, 재무재표에 의해 포함시키지 말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식부기, 발생주의를 도입하게 되면은 발생, 도입한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만 재무재표에 넣고 그 이후에 경영합리화에 초점을 두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혹시 시즈오카에서 그 논의를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이쥬 모리나오(시즈오카 현립대/한국어로 통역)

- 이전에 코멘트를 맡았구요. 지금은 파넬리스트를 맡은 이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행정시스템이 비슷하다고 느끼셨구요. 또 결국엔 똑같은 중복발언이 되긴 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중앙이 힘을 가져서 계획을 진행했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틀리다고 본인도 느끼셨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이런 개혁을 하느냐에 있어서 돈이 없으니까, 부채가 많으니까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굉장히 부담이 큼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적다는 게 사실이었구요. 먼저 질문을

어느 분께 하고 싶은데요. 한국에서는 그 지방이, 지방자치단체가 비교적 부채가 적다고 하셨는데 중앙은 어떠신지 누적실적은 어떠신지 부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과 함께요, 지금 질문하고 좀 틀리지만은 이런 공회계 개혁 제도를 함에 있어서 목적이요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투명화, 건전화가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논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불투명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주민에게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정보가 증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안다는 것만 그 자체만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주민들이 그 정보를 알고서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어느 분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논점은 방금 말씀을 드렸구요. 본인께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분권화라든지 글로벌화에 있어서 그 공회계 제도가 어떤 식으로 일본과 한국에 차이가 있는지 본인이 느끼신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큰 흐름으로써요, 분권화와 글로벌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똑같은 관점에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을 하시구요. 세계상황을 봤을 때 금융의 글로벌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금융에 대한, 재정에 대한 파워가, 금융글로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재정에 대한 파워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똑같이 의미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화라는 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소득배분이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소득세를 받아서 지역에 분배를 하는 글로벌화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에게 주는 돈, 배분이 적어질 수 있는데요. 지방정부에게 부여되는 재정배당금이 적으면 적은만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받는 복리후생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정에서 일을 하시던, 복리후생에 종사를 하시던 가정에 있었던 분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적어지시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분권화 내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앙정부의 파워가 약해지는 데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 이런 게 커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 분권화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질적인 논점이 되는 거는요, 이분 이주 선생님 생각하시기로는 그 중앙정부가 그렇게 힘이 떨어짐에 있어서 지방정부에 이양이 되는 힘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양이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그러한 정보를 캐치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활동이 어느 정도 커지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게 이 분권화, 그 다음에 행정시스템의 도입이라는, 아 죄송합니다, 공회계도입이라는 대한 궁극적인 토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중점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일본은 국가재정이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 그 재정,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 도입 목적이, 하지만 한국같은 경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한 가지, 이게 아까 설명을 어느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이요 지금 요부분입니다. 국가재정악화에 대해서 일본의 재정도입, 공회계 제도를 했는데 한국은 어떠느냐 이게 궁극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 스즈키 토오루(시즈오카 현 총무부 재정실/한국어로 통역)

- 아까 이삼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리에현)은요, 벌써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에 (리에현)하고 똑같이 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조금 늦으신 거예요. 아, (리에현)에서 먼저 실시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먼저 했을 걸 그렇게 한발 늦었다 아차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뭐 실제적으로 98년도부터 밸런스시트라든지 이런 걸 다 구비를 하셨구요. 지금도 한스텝 한스텝 이렇게 밟아가면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 조금 지금 좀 늦었지만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현 지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각 주민, 현지 일반 주민에 대해서도 그렇고 생각하셨던 것만큼 반응이 조금 없는 게 실정이라고 하십니다. 하나 발전된 걸로 치면요, 자산이라든 부채든지 현재 저희, 현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스톡을 전부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도록 우리가 지금 이만큼 부채가 있습니다, 이만큼 자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공표를 하셨답니다. 스즈키상께서는요, 예산을 작성하시는 재정실에 계시는데요, 일본도 그렇지만 이 현도 굉장히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회계를 무엇에, 공회계가 무엇에 도움이 되는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물론 예산이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확실한 미래 비전이 지금 없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 가와세(교토 부립대학/한국어로 통역)

- 지금 아까 잠깐 상황을 돌려서 이슈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으면 하는데요. 일본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빛을 중앙정부가 지방에게 지금 애네가 전가를 하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한국같은 경우는 한국의 중앙재정 상황과 이런 분권화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 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 배득중(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일본어로 통역)

- 우선 한국의 이제 재정상황을 보면은 부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OECD 가입 국가가 29개 국간데, 부채비율이 적은 나라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가장 부채가 적은 나라입니다. 그 반면에 지구상에서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마 일본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한국에 공통,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한국, 일본, 미국의 공통점은 뭐냐하면은 경제규모가 어느 정도 큰 나라 중에서는 조세부담율이 가장 적은 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가 큰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고 특히 일본의 부채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900조엔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쓰는 것에 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조세부담율이 낮은 나라에 속하는데 그런데 왜 재정적자가 적으냐하면은 한국은 아직까지는 사회복지 지출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습시다. 그런데 앞으로 50년 후에 향후에 재정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은 50년 후에는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큰 재정적자, 정부부채를 지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재정을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한국도 정부부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민연금제도를, 혜택을 좀 줄이고 조세 부담률을 좀 높이고 하는 쪽으로 좀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두 가지 다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도 현재까지는 재정상태가 좋지만은 점점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또 갖고 있는 결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또는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이런 정부회계 속에서 미리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미리 디택트를 해야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자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국의 재정적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 GDP의 한 30%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건전한 상태로 이제 아직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가와세(쿄토 부립대학/한국어로 통역)

- 본래라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중점적인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요. 지금 시간상 여기서 일단 마치기로 하구요. 밤에 교류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토론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사】

○ 배득중(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일본어로 통역)

- 세미나는 유익하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지금이 해변가에 가 있을 그런 시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방학인데다가 토요일날 이렇게 모여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유서 깊은 도시, 시즈오카에서 한일공동학술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처음 이 세미나 개최를 요청하였을 때, 현립대학에서 아주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니시가키 학장님과 고야마 학부장님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는 한국측 전문가들 중 대부분은 시즈오카에 초행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이 도시가 매우 매력적임을 금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저희를 환대해 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현립대학의 윤대영 교수, 요제 교수, 가와세 교수, 그리고 이주 교수가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제가 올 1월부터 한국정부회계학회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었던 사실은 “신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학회는 비영리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학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십니다. 이것은 학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일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식

교환을 하였는데, 이런 모임이 가능하게 된 이유 또한 상호간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들이 오늘 처음 회합을 가졌지만, 지적인 토론을 하는 가운데서 신뢰감이 축적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저희들이 한국에서 일본의 공회계제도를 배우고, 또 일본학자들이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를 서로 배우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곧 이어 이어지는 만찬 연회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못 다한 말씀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